

2025

1시간 완성
경찰행정법 각론
경찰공무원 필독서

엠북 공무원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휴대폰 화면에 최적화
- ★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 ★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서명 : 경찰행정법 각론

ISBN : 979-11-94286-53-0

발간일 : 2025-01-02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hanmail.net

정가 : 9,000원



경찰행정법 각론

[목차]

제1편 경찰법(p5)

제2편 경찰공무원법(p40)

제3편 경찰관 직무집행법(p74~126)

[약어]

장관들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청장은 경찰청장

청장들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은 경찰공무원

공상경찰은 공상경찰공무원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령은 행정안전부령

해양청장은 해양경찰청장

시도청장은 시도경찰청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부의사항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비고]

- 검은 글자는 법
- 보라색 글자는 시행령

제1편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3장 경찰청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6장 전국적 치안유지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경찰 기본조직, 직무 범위,
필요 사항 규정

2.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공 안녕,
질서유지 시책 수립/시행

3. 경찰의 임무

-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 범죄 예방/진압/수사
- 범죄피해자 보호
- 경비/요인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대응 정보 수집/작성, 배포
- 교통 단속, 위해 방지
-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 공공 안녕, 질서유지

4. 경찰의 사무

가. 국가경찰

- 경찰 임무 수행
- 단, 자치경찰사무 제외

나. 자치경찰

- 경찰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 다음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구체적 사항 정함

가) 주민 생활안전 활동

- 순찰, 시설 운영
-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지도
- 안전사고,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호,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 주민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위반 지도/단속 등
- 단,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 제외

나) 교통활동

-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심의, 설치, 관리
- 교통안전 교육/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 지원/지도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등 허가, 신고

- 교통안전, 소통

다)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안전 관리

2) 다음 수사사무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사항
정함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

-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경범죄,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가출인, 실종아동등 수색, 범죄

5. 권한남용의 금지

-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
- 부여된 권한 남용 금지

6. 직무수행

- 상관 지휘/감독 받아 수행, 서로 협력
- 구체적 사건수사 관련 지휘/감독의 적법성, 정당성에 이견 있을 때 이의 제기 가능
-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정함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7~11조

1. 설치

- 행안부에 둔다
- 위원장 1명 포함 7명
- 위원장과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정무직)

2. 위원

가. 임명

- 장관 제청으로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 장관은 제청시 정치적 중립 보장
- 2명은 법관 자격 있는 자